

인권정보자료실
ESj1.94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 탄압 실태 증언대회

때: 2003. 11. 5

장소: 향린교회 1층 강당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

인권정보자료실
ESj1.94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 탄압 실태 증언대회

때: 2003. 11. 5

장소: 향린교회 1층 강당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

차 례

1. 노무현 정부 노동인권탄압 상황보고

-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박강우, 민주노총정책국장)

2. 노동인권탄압의 실상 자료 모음

(1) 한진중공업

(2) 세원테크

√(3) 근로복지공단 - 비저장직.

√(4)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노조 말상 : 노조형의 명의 관련자 조사 - 검찰에서 (유류 감추 피해가 큰 조사)

√(5) 태광산업 · 대한 화섬 - 노조파괴 → 노조부인. 어항조직원. 강서.

√(6) (주) 효성 - 개성이 예상된(위협) > 2차 : 엄청난 액수 손배가압류. 저체 2건원이사님.

(7) 서울대공원 시설관리

(8) 삼성생명

(9) 화물연대

3. 노동열사 유서

(1) 박동준 열사 유서

(2) 김주의 열사 유서

(3) 이해남 동지 유서

(4) 이용석 열사 유서

1. 노무현 정부 노동인권탄압 상황보고

-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박강우, 민주노총정책국장)

노무현정권의 살인적 노동탄압

(1) 공권력 투입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6월 들어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 금창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원칙은 무너지기 시작하여 이후 한국오웬스코닝, 철도노조, KGI 증권,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파업 현장, 성남 낙원택시, 세원테크 등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사업장	투입일	사유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금창공업	6. 19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한국오웬스코닝	6. 25	임단협관련 4시간 부분파업에 경찰배치, 집회방해
철도노조	6. 28	노정합의 파기에 대한 파업
KGI증권	8. 3	구조조정, 직장폐쇄 반대 교섭요구 농성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8. 4	파업집회 해산 과정에 공권력 투입 연행
성남 낙원택시	8. 29	성남노동사무소 항의방문 후 해산과정
세원테크	9. 4	고 이현중 동지 장례 관련 농성

(2). 손배 · 가압류

노무현대통령은 당선자시절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손배 · 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노동부장관은 2003년 3월 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손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 의한 손배 · 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철도노조간부 개인의 부동산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인천지하철은 파면자의 퇴직금까지도 가압류를 하는 등 정부가 손배 · 가압류에 의한 노조탄압을 선도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는 한술 더 떠 노조위원장의 가족의 집과 선산에까지 가압류를 하여 신판연좌제와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정권 하의 손배 · 가압류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음은 물론이고, 노무현정권 하에서도 기업주들의 손배 · 가압류에 의한 노조탄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주의 열사를 죽음으로 내 몬 한진중공업의 경우 2002년 5월 30일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 20명의 임금, 주택과 노동조합비에 대해 7억4천만원의 손배 · 가압류를 풀지 않고 노조탄압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급기야 2003년 10월 13일 파업참가 조합원 180명에게 공문을 보내 10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총 150억원 손배 · 가압류를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것이 10월 18일 김주의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배 · 가압류 현황>

2003년 10월 29일 현재 손배, 가압류 규모는 46개 사업장, 1천481억 7천202만 5천222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89억 6천871만 3천72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892억 331만 2천150원이다.

2003년 1월 22일 당시 손배, 가압류 규모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손배 84,90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에 비하면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당시 집계상의 착오로 인해 효성노조의 손배청구액이 447억 3천만원이 과대계상되었던 것을 감안한 수정치인 1천775억 6천7백만원(손배 40,17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과 비교해본다면 가압류금액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188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열사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손배, 특히 가압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의 확산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약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손배, 가압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으나, 철도과업에 대한 정부의 손배청구와 경총 등 자본단체가 손배·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회원조직에 내려보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이후 한라병원, 대한항공,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등 10여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가 노사합의로 취하되었지만, 운송하역노조, 군포농한주, 인천지하철, 흥국생명, 삼영산업, 이구산업 등에서는 신규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사업장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5개 사업장 394억 7천만원으로 전체 사업장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압류 금액은 202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22.7%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10.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청의 경우 지난 6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75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원의 결정도 없이 철도노조 부동산과 7월분부터 조합비를 가압류했다. 더구나 철도청은 9월 8일 법원에서 조합비 및 개인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각결정이 났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9월분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무법행위로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파업기간동안 77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취지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배청구가 실제 손실과는 무관하게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노동자구속

2003년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참여정부-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관련 범위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하였으며, 4월 15일 노동부의 주요업무현황보고에서도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는 폭력, 파괴행위자 등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불과 4개월만에 포기되었다. 노무현대통령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불법투쟁을 엄단하는 데 있어서 그 법률의 내용에 개의치 않겠다는 발언으로 노동자구속을 선도했다.

노무현정권의 이런 정책은 2003년 9월 4일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에서도 노조측의 ① 생산·주요 시설 점검 ② 사업장 출입저지 ③ 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해 ④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한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불법상태를 제거하고, 노사간 면책합의와 관계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변화는 구속노동자 숫자에서도 확인이 된다. 2003년 10월 24일 현재 민주노총이 확인한 구속노동자 수는 144명에 달한다.

한진중공업에서도 김주익 지회장이 죽기 직전인 2003년 10월 1일에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 변재규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 김양수 한진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인수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 차해도 한진특수선지회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섰다.

세원테크에서도 2003년 9월 5일 전영웅 부지회장, 이용덕 대외협력부장, 권세 회계감사가 구속되었고, 이해남

지회장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상태로 들어갔다. 이미 2002년에 두 번의 구속을 당한 바 있고, 2003년 4월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출소한 이회남 지회장에게 또 다시 떨어진 체포영장은 이회남 지회장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갔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영등포경찰서장이나 경총이 주장하는 자살의 배후가 있다면 자본의 극단적 노조탄압에 가중된 노무현정권의 구속수배일 것이다.

(4) 장기투쟁사업장과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2003년 들어 발생한 분규 중 30일 이상 장기분규사업장은 9월 17일 현재 78개 사업장에 달하며(2003년 국정감사 답변자료, 노동부), 2002년도에 분규가 발생하여 2003년 8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도 10곳 714명에 달한다(자료 : 매일노동동향 2003. 10, 한국노동연구원). 이들 사업장에서는 모두 기업주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420 철도노조와의 노정합의, 58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 이후 친노정책 공격을 받자 형식적으로 노사간 교섭을 주선하는 데 머물렀을뿐 분규사업장 문제해결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오히려 주요한 투쟁이 진행될 때마다 노동자의 불법투쟁 엄단을 발표하여 사실상 사용자 의 편에서 개입해 왔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발표해 왔지만 140여명의 노동자를 구속시키는 동안 부당노동행위 기업주는 단 1명도 구속하지 않았다.

2002년 임단협투쟁을 2년째 해오고, 태풍 매미가 몰고 온 재난 속에서 129일간의 크레인 농성투쟁을 해 온 장기 투쟁사업장 한진중공업, 회사측이 설치한 철제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2년 이상 투쟁을 해 온 세원테크, 3개월 이상 교섭자체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이 모두 기업주들이 노조를 죽이기 위해 시간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죽어 갔다.

(5)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 노조파괴 방조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일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90년대 초 한국후고꾸를 비롯해 안산공단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용역깡패폭력을 비롯하여 2002년 한라병원 용역깡패폭력에 이르기까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 철거민, 개인채권추심 등 사회 곳곳에 용역깡패폭력이 판을 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비원은 노사분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 파업현장에서는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행위들은 경찰에 의해 눈감아지거나 비호되고 있다.

노무현정권 하에서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오웬스코닝 등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기업주들은 경찰병력이라는 공적 폭력과 용역깡패라는 사적 폭력을 모두 쥐고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6) 총체적 노동탄압

노무현정권은 NEIS·철도·화물 등 노정합의파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제정, 근기법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투쟁마저 경제파탄주범, 집단이기주의, 노동귀족으로 몰아갔다.

정부 스스로가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판에 한진제철과 세원자본인들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는가? 정부가 앞장서서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기업주들이야 오죽했는가? 노동부가 비정규노동자를 더욱 확대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도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요구를 수용하겠는가?

상황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탄압에도 부족하여 동지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한달 전인 9월 4일에 '사용자 대항권 강화'까지 들고 나왔다. 기업주들은 이제 더 이상 걸릴 것없이 노동조합을 몰아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2. 노동인권 탄압의 실상 (자료 모음)

1. 한진중공업

살인적인 노동착취 : 임금동결, 강제퇴직

2002년을 기준으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평균연령 44.5세, 평균근속 17.2년에 이를 정도로 오랜 노동에 시달려왔지만 기본급은 106만5940원, 통상급 120만 5886원 정도였다. 이는 조선 7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선업체 가운데 중소기업 규모인 대동과 비교해 보아도 임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7사 임금 현황> (03년 3월말 기준, 단위:원)

	한진중공업	삼성	STX	현대미포	삼호	현중	대우
기본급	1,065,940	1,111,083	1,162,989	1,120,008	1,165,027	1,337,330	1,364,273
통상임금	1,205,886	1,599,726	1,301,713	12,58,808	1,362,903	1,514,501	1,527,640
월할상여금	810,027	809,807	834,333	729,124	832,726	928,086	862,131
평균임금	2,031,676	2,891,962	3,010,421	2,466,776	2,594,747	2,442,138	3,010,261

기업경영이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무비는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2000 - 2002년간 조선 6사의 전년 대비 노무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한진중공업(주)의 노무비만 감소하였다. 실제로 한진중공업의 노무비(=급여+퇴직급여+기타노무비)는 2000년 1672억 8600만원, 2001년 1671억 1400만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1397억 8200만원으로 1-2년 전에 비해 274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2002년 4-5월의 650여명에 달하는 생산직노동자의 강제 명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7사의 전년 대비 노무비 증가율(2000-2002년)> (단위: %)

	한진중공업	삼성	대동	현대미포	삼호	현중	대우
전년대비 노무비증가율	-8.3	8.8	30.1	16.2	25.8	12.6	223.8

<한진중공업의 최근 3년간 노무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00.12	2001.12	2002.12
노무비	167,286	167,114	139,782

손배소송·가압류를 앞세운 한진중공업 노조탄압

91년 한진중공업에 민주노조를 세우려던 박창수 위원장이 감옥에서 안기부의 개입흔적을 곳곳에 남긴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박창수 열사의 의문사진상규명 투쟁에 대해 노조간부 12명을 상대로 7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94, 95, 98년과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번에 걸쳐 노조와 노조간부 113명에게 총 18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자행한 한진중공업은 결국 김주익 지회장마저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1) 2002년 3월 강제사직, '인력체질개선'

2002년 3월부터 회사는 관리직 사원을 대상으로 돌연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전체 관리직 1천명 중 110명이 강압을 이기지 못해 사표를 냈다. 이어 해고열풍이 생산직으로 넘어왔다. 노동자 1천6백명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 회사는 3년 이내에 정년을 맞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공략에 들어갔다. 결국 약 650여명의 노동자를 강

제사직 시켰다. 4월 길거리로 쫓겨난 한 조합원의 어머니와 장애인 여동생이 강제사직 뒤 닥칠 생활고를 비판해 음독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끝까지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직대상자'들은 해고보다 더한 수모를 당해야 했다. 회사는 고령노동자 138명을 대상으로 '인력체질개선'이란 것을 도입해 엑셀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독후감쓰기 등 과제물을 내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모두 용접사와 제관공 등으로 컴퓨터는 물론 독후감과는 관련 없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03년 5월 희망퇴직 종료와 교육이수자 원직복직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교육을 마친 108명 가운데 복직자는 고작 20명. 나머지는 모두 기한조차 알 수 없는 대기발령을 받았다.

(2) 2002년 5월, 손배·가압류 7억원 20명 정계

노조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2002년 5월 30일부터 이틀동안 전면파업이 벌어졌다. 회사쪽은 지회 간부 20여명과 조합비에 대해 7억 4천 4백여만원 손배·가압류, 지회장 등 14명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2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0명을 징계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3) 임금동결과 배당금 잔치 속에서 해를 넘긴 2002년 임단협

2002년 3월에 시작된 임단협은 해를 넘겨 계절이 일곱 번 바뀔 때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2002년 한해 당기순이익이 239억원에 달하고 2000~2003년 당기순이익 총액이 429억5,600만원이었지만 노조에겐 '임금동결'을 강요했다. 한진은 2003년 순이익 중 159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했고, 이 과정에서 조남호 회장과 관련된 회사는 총배당의 40.9%를 챙겼다. 조 회장 자신도 모두 7억7,200만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80억은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보관했다.

(4) 김주익 지회장 크레인 농성 돌입 그리고 합의파기

참다못한 김주익 지회장이 2003년 6월 11일 85호 크레인 위로 올라가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노동부 중재로 △임금 7만5천원 인상 △손배·가압류 등 현안문제 해결 △성과급 100% 지급 △타결금 50만원 지급 등에 힘겹게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자와의 합의파기를 손바닥 뒤집듯하는 노무현정권 따라배우기를 하듯 회사는 닷새만에 이를 뒤집으며 사태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마산과 울산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면 협상에 응하겠다"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식의 조건만 늘어갔다. 조합원들을 회유·협박하며 본격적으로 파업대오를 교란시켰다.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정권과 한진재벌

노무현정권은 2003년 10월 1일에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 변재규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정홍형 금소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 김양수 한진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인수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 차해도 한진특수선지회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섰다. 조만간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흥흥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게다가, 10월 14일 새벽 2시부터 50여동의 농성천막 앞에 있는 선박을 침단장비를 동원해 빼앗아갔다.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노 분열공작에 더욱 열을 올리고, 10월 13일에는 사측이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10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총 150억원)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2003년 10월 17일, 85호기 크레인 앞에서 아침집회를 하던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35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아침 집회때 마다 인사하던 김주익 지회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크레인 농성 129일째에 태풍 매미까지 이겨냈던 김주익 지회장은 두 장의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출처>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박강우, 민주노총정책국장)

2. 세원테크

열악한 노동조건

<세원테크 자본 개요>

- 계열사 현황 : 세원정공(본사, 대구 성서공단 위치)
세원물산(계열사, 경북 영천)
세원ENI(계열사, 경북 영천)
세원테크(계열사, 충남 아산)
- 세원그룹 회장 : 김문기
- 제조 품목 :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
- 종업원 수 : 세원테크(관리직 포함 150여명)
- 조합원 수 : 현재 62명(파업 참여 조합원 수 : 25명)
- 원청사 : 현자 아산, 기아 화성, 현자 울산

세원테크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자동차부품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야만 했다.

- 임금 : 잔업 특근으로 한달을 꼬박 채워도 받는 월급이 80만원대인 저임금에 시달렸다.
- 노동환경 : 한여름 현장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노동조건 하에서 땀을 많이 흘려 탈진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해 소금을 비치해달라고 요구하면 김장을 할 때나 사용하는 시커멓고 굵은 막소금을 먹으라고 주었다.
- 강제노동 : 잔업과 특근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으며, 일요일 사내기숙사에서 쉬고 있으면 중간관리자(조반장)들이 찾아와 반강제로 끌고가 일을 시켰다. 야간조 근무일 경우 주간에 8시간 예비군 훈련을 하면 당연하게도 야간조 출근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구타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피해 당사자가 바로 고 이현중 조합원동지였다).

세원 자본의 백화점식 노조탄압

<투쟁 경과>

- 2001.10.16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결성
- 2001.12.12 150여명의 용역깡패에 맞선 일주일간의 파업투쟁과 지역총파업으로 민주노조 사수
- 2002. 1.24 단체협약 체결
- 2002. 5.22 임금인상 파업 돌입
- 2002.7.초순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회사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 2002. 7.14 공권력 투입
- 2002. 8.16 노동조합 진입을 하는 과정에 이현중 조합원 두개골 함몰 부상
- 2002.10.22 계속된 현장진입 투쟁 전개 끝에 타결
- 2002.11. 1 조합원 현장 복귀
- 2002.12. 9 지회장 포함한 수배자 4인 자진출두 후 구속
- 2003. 3.18 구속자 4인 전원 해고
- 2003. 4. 1 금속노조 2003 임단협 교섭 돌입
- 2003. 4.11 구속노동자 집행유예로 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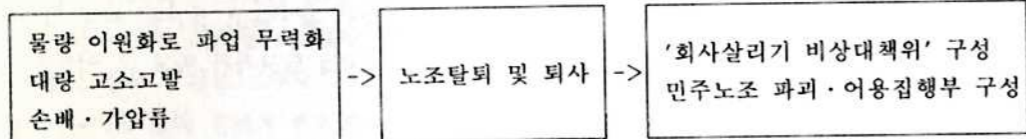
- 2003. 7. 2 임단협 파업 돌입
- 2003. 8.26 투병중이던 이현중 동지 사망
- 2003. 8.28 교섭결렬
- 2003. 9. 4 구사대 유가족 폭행, 노동자 64명 연행
- 2003. 9. 5 간부 3명 구속, 이해남지회장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수배
- 2003. 9.11 추석연휴 세원정공앞 천막농성 전개
- 2003. 9.17 6차 교섭 결렬(이후 교섭 열리지 않음)
- 2002.10.23 오후 8시 50분경 세원테크의 본사 세원정공안 관리동 앞에서 분신

(1) 용역깡패를 동원한 살인적 노조탄압

2001년 12월 매일 특근과 잔업을 해도 한달 80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세원테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세원테크 사측은 150여명의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몰아냈다. 2001년 12월 12일 금속노조 충남지부를 포함한 충남지역 동지들의 총파업을 통해 용역깡패를 쫓아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내었다.

(2) 전문 노조파괴자의 노조파괴시나리오

12.12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지회장(이해남)과 사무장(구재보)이 2002년 1월 20일에 구속되었고 사측은 2002년부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생산목적이 아니라, 노무관리 목적으로 대표이사(장현수), 관리이사(정상민), 생산이사(김성백)를 고용하여 '노조파괴시나리오'(2002년 7월 8일 공장 사무실에서 발견됨)를 만들었다. 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물량을 이원화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대량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도하여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후 '회사살리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나리오는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3) 물량 이원화를 통한 파업 무력화

2002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스카우트된 노조파괴자 3인은 일정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물량을 이원화시켰다. 파업 돌입 전부터 물량 이원화에 대한 소문(노동조합의 투쟁 때문에 원청이 물량을 빼앗아 간다)을 공공연하게 유포시키고 조합원들에게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심어주었다.

(4)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성향 분석과 노노 갈등 유발을 통한 어용노조 구성조합원들에 대한 성향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노노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조합원들의 성향을 색깔별로는 적색과 청색, 흑색으로, 글자 모양으로는 고딕체, 명조체, 고딕 기울임체, 명조 기울임체, 고딕 기울임 밑줄체, 명조 기울임 밑줄체, 글자별 색깔 분석, 또한 영문으로 F, F, M, PM, B, PP, PP, P, J, ㄱ, ㄴ, ㅈ, ㅊ, ㅍ, ㅍ 등. 결국 조합원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석하여 회유, 협박했다.

(5) 손해배상, 가압류를 통한 노조 탈퇴 협박

2002년 5월 22일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9억 8천만원의 임금가압류와 2억원의 재산가압류를 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압박했다. 그 결과 실제로 당시 임재만, 박순원, 이상호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고, 김인태, 신동진 조합원 등 개인적 접촉으로 노조탈퇴를 유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합원 모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차등을 두어 파업참가 조합원을 탄압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했다.

(6) 바리케이트, 감시카메라 설치로 조합원과 비조합원들과의 분리

2002년 7월 14일 공권력 투입으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쫓겨났다. 이후 사측은 8월 초순에 폭8m, 높이 2m의 철문 바리케이트를 회사 진입로에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하여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분리시키려 했다. 2002년 10월 22일 노사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트를 철거하지 않은채 일상시에는 가운데 부분만을 열어두었다가 노동조합이 행사를 한다거나 투쟁을 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을 다시 끼워넣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현장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

(7) 노조탄압으로 이현중 동지 사망

2002년 8월 16일 이현중 조합원이 회사에 진입하기 위하여 갈고리로 철문바리케이트를 건어내려 하자 회사측의 구사대는 갈고리를 절단했다. 절단된 갈고리는 이현중씨의 두개골을 함몰시켰다. 2002년 10월 22일 회사측은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회사측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3년 7월 상학도암이 발견되었고, 2003년 8월 26일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의사소견).

노무현정권의 탄압까지 가해져 이해남 지회장 분신

이에 노조는 8월 26일 위로금이 아닌 보상금 지급, 회사안에서의 노제, 바리케이트 철거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9월 17일 6차교섭에서 사측은 '이현중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위로금 4천만원 지급, 노제에 대해서는 세원테크 내가 아니라 진입로 상에서 진행, 바리케이트는 노제 당일만 철거' 입장을 고수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후 교섭마저 열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9월 5일 세원테크지회 전영웅 부지회장, 이용덕 대외협력부장, 권세 회계감사가 구속되었고, 이해남 지회장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상태로 들어갔다.

2003년 10월 17일 수배중이던 이해남 지회장은 세원테크지회 홈페이지에 유서내용과 흡사한 글을 올렸고, 10월 23일 "이들 노조파괴자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10월 23일 오후 8시 50분경 세원테크의 본사 대구 세원정공 관리동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 후 대구 동산의료원으로 옮겨진 이해남 지회장은 전신 3도 화상(95%)에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출처>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박강우, 민주노총정책국장)

3.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영) : 노동부 최대의 산하기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업무
 노동자 구성 : 3000명 중 정규직 2000명, 비정규직 1000명
 비정규 노동자 : 계약직, 일용직, 어린이집교사
 계약직 노동자 : 1년 기간, 대부분 매년 재계약 (임금 월 110~120만원)
 정규직과 같이 정수업무, 보상업무, 재환상담업무 담당
 일용직 노동자 : 3개월 단위 재계약(임금 월 60여만원)
 부속실 단순업무 담당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의 산하기관이다. 노무현정권은 대선공약으로 그리고 출범 후 노동정책으로 노동내 차별해소 그 중에서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정부의 영향력이 직접 행사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2003년 입단투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을 더 확대한다는 억지 주장을 퍼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웠다.

바로 그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30%가 넘는 천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 또 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임금은 사업비의 일용잡급으로 편성돼 있어 노동부가 예산편성하면서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인건비 상승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차별, 일방적인 인사고과, 계약해지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나열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비 문서와 같은 비정규직관리세칙에 의해 계약을 매번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 속에서 떨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근로복지공단의 부당노동행위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투쟁 경과>

- 2003. 3.23 노조결성
- 2003. 6.24 1차 교섭
- 2003. 7.1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교섭 당사자 문제)
- 2003. 7.2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과("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다")
- 2003. 8. 4 4차 교섭(근로복지공단 불참으로 무산)
- 2003. 8. 8 5차 교섭(근로복지공단 불참으로 무산)
- 2003. 8.11 중앙노동위원회 2차 노동쟁의 조정신청(교섭해태 문제)
- 2003. 8.12 과천청사(노동부) 앞 1인 시위(이용석 광주본부장)
- 2003. 8.14 과천청사(노동부) 앞 1인 시위(춘천지부장)
- 2003. 8.20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중앙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 2003. 8.29 6차 교섭(사측 단체협약안 제시하지 않음)
- 2003. 9. 4 7차 교섭(사측 단체협약안 제시. 사측에서 실무교섭 전환 요구)
- 2003. 9. 9 1차 실무 교섭(사측은 기본 협약안 합의 불가 입장)
- 2003. 9.18 2차 실무 교섭(사측은 합의 불가 입장)
- 2003.10. 7 8차 교섭(사측 수정안 제시하지 않아 교섭 결렬)
- 2003.10. 8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2003.10.1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진행 권고
- 2003.10.13 9차 교섭(합의사항 없음)
- 2003.10.1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노조는 수정안 제출했으나 사측 수정안 제출하지 않음)
- 2003.10.16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 2003.10.20 파업 찬반투표(파업 결정)
- 2003.10.23 간부파업
- 2003.10.26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중 이용석 광주본부장 분신

(1) 비정규노조 결성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3년 4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 57세 정년보장, △ 1년 근무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 근무시간 조합활동 보장, 유급 전임 3명인정, △ 임금을 '사업비'에서 '급여항목 인건비'로 전환, △ 재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철폐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 근로복지공단의 부당노동행위

그러나 놀랍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까지 했다. 결국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당사자 질의를 냈고 7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이라고 답변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하며 이용석 광주본부장은 8월 12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다가 탈진하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고 교섭의 진전이 없자 10월 20, 2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0월 27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의 분신

2003년 10월 26일, 비정규노동자의 수와 차별 확대를 초래할 노무현정권의 비정규노동자 관련 정부입법안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의 비정규노동자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진 중에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지역본부장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 지난 31일 숨을 거뒀다.

<출처>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박강우, 민주노총정책국장)

4.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노조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치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전임비를 “금품 갈취”로 몰아부치며 사측의 주장만 인정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노조 전임자 5인 구속, 1인 불구속
- 건설산업의 지역노조는 2000년부터 건설현장과 산업안전법, 현장 내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약 300여개의 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됨. 이 단체협약에는 노조 전임비 규정이 있어 현장의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전임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음. 각 지역노조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장에서 산업안전활동, 퇴직공제제도 적용, 현장대표 선출, 산업안전보건위 선출, 원청시공사 직영노동자 임금 인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음.
- 그런데 갑자기 대전충청경찰서에서 2003년 9월 16일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충청노조 전임자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내더니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면서 대전충청노조 전임자 5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된 상황임. 현재 대전충청노조는 24개의 현장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4개 현장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황임.
- 경찰은 강력반에서 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틀간격으로 조합 전임자들을 소환하고 처음부터 전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데도 집에서 체포를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장해1등급의 산재노동자인 이○회위원장까지 구속을 시키고 있음. 이에 이○회위원장은 매일 의수를 갈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임에도 며칠 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병보석으로 해결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음.
- 경찰은 그동안 전혀 사측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를 집중 추궁하며 무조건 강요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논리대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은 현장소장에게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강요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 갑자기 전임자 5명을 일시에 구속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노조는 정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임비가 수령된 것이라고 하여도 경찰은 노조측의 주장은 일체 무시한 채 사측의 논리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는 장해1급 산재노동자까지 구속을 시키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이에 대하여 “사기, 공갈, 갈취”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노조에 전혀 확인도 없이 노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음.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부정

- 그동안 노사합의인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던 전임비를 사측은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지급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음.

<출처> 민주노총, 2003 노동탄압 백서

<성명> 김·경은 명분 없는 비밀수사, 강압수사, 기획수사 중단하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0월 2일 대전충남지역의 건설노조 간부 6인의 구속으로 시작된 건설노조 탄압 사태는 천안에서 2인의 간부를 추가로 구속하고,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며 전국화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연맹은 김·경의 수사 과정을 보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전 및 천안에서 출두요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출두일자를 약속했음에도, 사전에 긴급체포한 점.

둘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불구속된 사람을 다음날 아무런 보충사유 없이 재구속한 점

셋째,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지 2개월밖에 되지 않고, 단 한 차례의 단협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은 사람을 긴급체포해서 구속하고, 4월에 단협 체결 과정에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구속한 점.

특히 경기도 지역의 수사 관행을 보면 이해 하기 힘든 지점은 훨씬 많아진다.

경찰들이 조사하러 왔다가 현장에 조합 간부들이 있자 현장 주위를 배회하다 도주하고, 급기야는 관리자들을 현장 밖에 있는 커피#49686;으로 몰래 불러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경찰은 모든 수사를 비밀리에, 마치 007작전을 퍼듯이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자들에게 경찰이 수사했다는 사실을 노동조합 측에 절대 발설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

10월 29일 안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수사로 모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며,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불과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형사과장은 화성지역에 있는 주공사업단 소장 11인을 모아 놓고,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30일 3시까지 안산경찰서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출두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직접 소환한다는 협박과 함께...

현재 안산경찰서는 자신의 관할지역인 안산을 넘어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오산, 화성의 건설현장까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협약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안산경찰서는 '어차피 건설노조 조사중이니까 사진 다 찍어'라는 등의 위협을 가하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방해하며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연맹은 작금의 탄압 사태가 발생한 이후 대검찰청, 경찰청, 경기도경, 안산경찰서 등 공안 담당자들을 술하게 만났다. 그들 모두가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이 수사를 기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다. 또한 전국으로 확대 일로를 걸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계속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노동조합 측과의 면담에서 자신들이 한 발언들을 계속 어기고 있으며, 건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대한 강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몇 시간이고 같은 질문을 계속하며 원하는 대답을 줄 것을 강요하고 있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연맹은 김·경의 이러한 수사 관행과 수사 지역의 확대 추이를 감안했을 때, 이 사태가 결국은 철저히 공안 기관에 의해서 준비되고 조작된 기획수사·표적수사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개입해서 노사 양측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경찰은 조속히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노사 모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끝>

5. 태광산업 · 대한화섬

손해배상, 가압류

- 태광산업 · 대한화섬 주식회사는 1961년 9월 창립하고 62년 6월부터 자본금 4천만원으로 무역업무를 개시하면서 출발해 현재 자본금 122억 7백만원, 자산 2조 4천31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음. 창립 후 40년간 단 한번도 적자가 없었으며, 국가적인 환란시기에도 3년동안 4천억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이 "AA"인 초우량 기업으로서 부채비율이 32.8%밖에 되지 않고(현재는 3.5%) 유동성자금이 5,000억 원 이상이며 자본잉여금이 8,752억 원에 달함. 이런 회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음.

- 태광산업은 2001년 전체조합원 2,047명중 무려 85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127명)와 강제 희망퇴직(723명) 시켰는데 당시 이유는 2002년, 2003년 2004년에 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사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

- 회사는 2000년 11월에 자회사인 흥국생명의 사옥을 2,530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부실한 흥국생명 후순위 사채를 100억원을 투자해 사들여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2001년 4월에는 LG텔레콤에 103억원을 출자해 지분 3.5%를 확보하였으며, 2001년 6월18일에는 한국케이블 TV에 100억원을 출자하기도 하였음. 또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대주주들에게 주식현금배당을 35%나 하였음. 이로 미루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태광산업 · 대한화섬 노동조합은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2001년 6월 12일부터 83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고 723명의 강제희망퇴직과 127명의 부당정리해고를 당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91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하였으며, 파업투쟁 2년이 지난 2003년 7월 18일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중임.

20억(어용노조) 2억
 민주노총 탈퇴 <출처> 민주노총, 2003년 노동탄압 백서
 2003년 → 한국노조에 가입. → 탈퇴(남도 거대 가입)
 상한노조 단체가입
 노조 임원인상 요구 5%
 노조 임원인상 15%인상
 노조 조건: 노조성립까지 탈퇴.
 손해배상, 가압류
 파업기간까지 400여명, 300여명까지 지고.
 * 2002년 - 40여명
 * 2003년 - 234명

6. (주)효성

- (주)효성은 2001년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총파업투쟁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 해고되었고, 노동조합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수백 억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청구된 채 2년이 넘고 있음.

- 최초로 500여명에 이르던 손해배상 대상자에 대해 (주)효성은 2년에 걸쳐 선별적으로 취하하였으며, 최근에는 해고자와 현장에서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

-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거나 회사에 의해 해고됨으로써 이미 모든 책임을 질만큼 짊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개인의 기본 삶이 완전히 파탄날 지경에 이르는 등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에 시달려왔음.

라. 더욱이 아직까지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은 당시 파업을 지도했던 노조지도부도 아닌 평조합원들이 대부분인 상황.

<출처> 민주노총, 2003년 노동탄압 백서
 * 동영가래 - 무렵의 (별근도 없고)
 손해 가압류: 구상금까지 가져도 못하는데, 독재만 아니라
 집안도 엉망. 아이들도 학원도 못가고, 아버지가 사계각도, 라갈름 빈방 밖에.
 아파트로 다니면서 과점도 방문하지 못했다.
 '사람이 따라가려' - 이젠 사대만가.

7. 서울대공원 이바람

해고까지의 경과 - 200일째의 천막농성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금 현재 과천시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앞에서는 200일이 넘게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본청과 서소문별관앞에는 매일같이 60세가 넘는 노인네들이 복직을 위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에서 청소일을 한지 20년 가까운 늙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서 힘겹게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84년에 개원한 과천시서울대공원은 87년에 청소 및 동물분뇨 수거작업을 직영에서 외주용역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대원관리라는 회사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작업용역을 수행하였고 2002년은 웅비환경에서 낙찰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2003년 4월 17일부로 다시 대원관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원관리는 4월 17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20년 넘게 대공원에서 일해온 노동자 중 비조합원만 고용을 승계했고, 조합원 중에서도 노조탈퇴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한해서 고용을 승계했다. 이에 따라 조합탈퇴를 하지않은 23명의 조합원은 고용승계를 거부당했고 결과적으로 해고가 된 것이다.

대원관리의 조합원 고용승계 거부 이후 조합원들은 대공원소장실 항의면담, 소장실 점거, 대공원 분수대에서 집회, 선전전등을 통해 투쟁해 왔으나 대원관리는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며 '노조는 죽어도 인정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대공원 관리소장 또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23명의 해고노동자들은 노조를 포기하고 재고용되느니 차라리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로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대원관리의 반노동자적 행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업체인 대원관리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대공원의 청소업무를 해왔던 업체이다. 이 업체는 2001년도에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을 무급휴직 시키는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노동조합 간부등 4명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 또한 서울대공원의 계약이 종료된 2001년 12월에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형사입건되어 현재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 있다.

2003년 4월 17일에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을 다시 맡으면서 비노조원과 노조 탈퇴서를 가져오는 사람만 고용을 승계했으며 노조원들은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노조탈퇴서에 쓰여져 있는 "본인 000은 노조로 인해 취직이 안됨으로 노조를 탈퇴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원관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적나라하게 표시한 것이다.

서울시의 직무유기

대원관리는 서울대공원 환경작업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중 92년부터 97년까지 총 55회에 걸쳐 사문서 위조(노무비 과다계상)로 서울시의 공금 1억 5천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고, 이 건에 대해 2001년에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7천 6백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이후의 모든 입찰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원관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올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체에게 또 용역 업무를 준 셈이 된다. 또한 서울시는 당시 대원관리의 부정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문책도 한 바가 없다. 이는 방만하게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원관리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92년~97년의 사문서 위조 이외에도 98년 이후 2001년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서 상의 인원을 모두 취업시키지 않고 일부인원을 무급휴직시키는 방법으로 휴직자의 임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하는 의무를 서울시가 방기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부정업체를 비호하는 서울시

대원관리는 현재 해고된 23명의 노동자에게 2001년 당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대공원과 대원관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 중에는 “울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액을 타목적으로 사용하여 임금체불 등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2003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대공원과 서울시, 그리고 입찰을 대행하고 있는 조달청에 대해서 대원관리의 위와 같은 입찰결격사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대공원은 과거의 일이므로 지금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찰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감사관에 제출한 민원내용에 대해 감사관에서는 내부문건을 통해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입찰참가업체의 자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과거 서울대공원 용역 수행시 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는 등 서울시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고, 현재도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업체가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대원관리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대원관리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서울대공원 담당자인 총무과 김완식(행정7급)에 대해 훈계조치할 것을 대공원 관리소장에게 통보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원관리를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공문에서는 “사문서 위조·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대원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민원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대통령 은전조치(2000. 1. 15.)에 따라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책임회피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얘기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은전조치라 함은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부정당업자’로 제재도 받지 않은 대원관리가 어떻게 은전조치에 해당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2000년 1월에 취해진 대통령 은전조치는 건설업에 대한 것으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대원관리는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은전조치의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으로 자신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도 문제지만, 대원관리처럼 반노동자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이 활개를 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배후에는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대원관리의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업체를 잘못 관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유아무야 넘어간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현재의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있게 풀어야 할 것이다.

<출처>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대공원 지부

8. 삼성생명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1. 삼성생명은 98년 IMF를 빌미로 3조4천억 원의 적자예상, 회사의 위기, 인원 감축 불가피 등을 말하며 1723명(이중 여성노동자 1200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였다. 심지어 밀실에 가두고 1:1로 협박하여 강제로 사표를 쓰게 했다. 그러나, 적자로 망한다던 삼성생명은 99년 3월 결산에서 956억원의 창사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신문지상에 보도했다. 그리고, 이근희 회장의 경영실패작인 삼성자동차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빼앗긴 우리의 자리에 삼성자동차 및 계열사 전입, 신입사원채용, 강제해고자의 계약직 전환 등으로 1700여명의 자리는 고스란히 채워졌다. 삼성생명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감축이 아닌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의 경영실패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생명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이후 삼성생명에서 사기와 기만에 의한 부당해고를 당한 강제해고자들은 “삼성생명 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하여 현재까지 5년 동안 “원직복직”을 외치며 삼성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해고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집회 때마다 삼성의 직원이 나와서 해고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갖은 고소고발, 가압류, 손배소, 벌금 등으로 해고자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 동지중 한사람은 36만원의 재판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무려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삼성생명에 만기가 지난 보험을 지급중지를 내려 찾지 못하게 하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본사건물에는 대사관을 유치하여 건물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의 집시법을 악용하여 원천적으로 집회를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삼성생명 앞에서 집회를 하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부과시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치졸한 탄압에 맞서 버랑 끝에 걸린 우리 해고자들은 이제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단식투쟁을 결의하게 되었다.

3. 삼성생명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는 연령이 대부분 30-40대 이상의 건강이 염려되는 여성해고자들로 10월8일부터 전국에서 상경하여 결사투쟁을 돌입한 후 10월 13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노숙 단식투쟁을 벌인 천막에 의지하며 농성장을 12일째 사수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에서 삼성은 우리 동지들의 고통도 외면한 채 오로지 미행과 감시로 생명에 이상이 있느냐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노숙 단식투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동지들의 희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4. 우리 동지들이 단식으로 11일간이나 사수하던 농성장도 전투경찰에 의해 침탈 당했다. 단식투쟁 11일째인 10월 23일 15시경 남대문경찰서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오랜 단식으로 기력이 쇠약해진 여성동지들과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이나 강제로 연행했다. 우리 동지들이 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엮드려 있었는데 삼성과 경찰이 야합하여 휠체어까지 동원되어 우리동지 한 사람을 옮기는데 무려 10여명의 여경이 동원됐다. 남대문경찰서에 4명(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포함), 노원서 5명, 성북서 5명, 도봉서 5명, 종암서 5명으로 서울외곽지역에 분산해서 연행한 점을 볼 때 우리 조직의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여성동지 중 2명이나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5.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상노숙 집단 단식 결사투쟁이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침탈 당했지만 단식은 감방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복직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으로 승리할 것이다.

<출처> 삼성생명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9.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파기

- 가. 도로비 : 야간할인확대, 요금체계개선 추진중
- 나. 휴게소확충, 편의공간 제공 : 편의공간(연락소) 제공거부
- 다. 불법다단계근절 : 서울, 부산 등 주요지역 실적미공개, 단단계 가시적 개선 없음
- 라. 수급조절 등 보완책 마련후 지입제 폐지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를 병기하고 담보제공시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도록 하였으나 실행상의 보완책 미비
 운전자자격제도 마련하였으나 업무복귀명령제와 연동
 선결과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등록제 시행추진 중
- (*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별등록제 주장을 공식 철회하고 수급조절 방안 논의로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마. 과적단속제도개선 : 법무부, 관세청 협조, 그러나 현장의 단속관행 개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바. 산재보험적용 : 자영업자 방식으로 일방적 추진
- 사. 노동3권 :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로 이관(화물연대와 직접논의 없음)
- 아. 경유보조금지급 : 파업이후 철회
- 자. 중앙교섭지원 : 지원노력 있었으나, BCT분야에서 산자부가 노골적으로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여 사태를 악화시킴

계약해지 등 단압현황(11/4 현재)

가. 구속(5월투쟁이후, 명단별침)

지부	인원	지부	인원
충청	4	경남	
대경	1	울산	1
포항	15	전북	
광전	1	부산	6
BCT	3	경인	2
위수탁		본조	3
		계	36

- * BCT 3 - 충청지부소속, 별도정리함
- * 충청지역 비조합원 1인 제외
- * 위 현황에는 보석출소자 9인, 집행유예선고자 5인이 포함됨
- * 실행선고자: 김달식(포항지부장, 1년), 최춘태(포항지도차장, 8월), 김대익(부산동부지 회장, 1년), 고창규(부산남부지회장, 1년), 최명섭(부산양산지회장, 1년), 최규철(단양지회조직담당, 8월)

나. 체포영장 발부자(7월당진투쟁 포함)

번호	이름	소속	직책	비고
1	김종인	본조	위원장/의장	연말까지 조직정비 후 출두
3	윤창호	본조	조직국장	연말까지 조직정비 후 출두
5	강태운	충청지부	지부장	

다. 계약해지

지부	인원	지부	인원
충청	138	경남	3
대경	33	울산	13
포항	183	전북	미파악
광전	33	부산	미파악
BCT	155	경인	미파악
위수탁	240	계	798

* 개별용차 다수 제외

라. 손배청구

지부	소속	대상	청구액
광전	태인지회	지회장	23억
충청	영동분회	한라시멘트 10명	4억
포항	동방지회	4명	1억5천만
울산	남구1지회	효성 3명	미확인(가압류)

마. 과태료(지침에 의한 투쟁참여시만 해당)

소속	사유	주간	야간
광전 광주지회	9/1-2 부산투쟁	44	22
광전 태인지회	9/1-2 부산투쟁	14	3
광전 컨테이너지회	9/1-2 부산투쟁	7	
경남	9/1-2 부산투쟁	17	7
울산	8/29 9/1(공용주차장)		29
울산	9/1-2 부산투쟁	2	1

* 과태료 : 주간 5만원, 야간 20만원

바. 차량파손(지침에 의한 투쟁참여시만 해당)

소속	사유	대수	금액
충청		1	10만
경남		1	50만
경인	9/1-2 투쟁	2	90만
광주전남		11건	

* 지부에서 보고된 현황에 의함

사. 부상자(지침에 의한 투쟁참여시만 해당)

이름	소속	사유	금액
김태일	경인	9/1-2 투쟁시 연행중 엄지손가락 골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 개악

가. 화물운송제도개선추진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여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관련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9월 5일 파악철회 후 회의개최 거부하고, 9월 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시행규칙-산재보험법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무더기 입법예고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협의요구조차 거부함

나. 개별등록제 즉각시행 : 1997년 121,257대이던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5톤이상)는 2002년 195,806대로 61%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용 물동량은 499만톤에서 569만톤으로 단지 14% 증가에 그쳤을 뿐임(교통개발연구원, 2003) 이것은 공차운행을 증가와 덩핑경쟁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 강요된 과적과 과속으로 이어졌고, 결국 2003년 생존의 나락으로 내몰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을 불러왔음.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개별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동료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의 경쟁에 내몰리게 됨. 따라서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방안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별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즉각적인 개별등록제 시행요구는 철회한 바 있음. 단 지입제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등록원부에 현물출자된 위수탁차량임을 병기하고 담보제공시 금감원의 협조를 얻도록 한 정부방안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 또한 행정관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실질적인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입제 폐단의 개선이 가능함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개별등록제 즉각시행이라는 최악의 방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다.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 정부는 화물연대가 보호를 요구할 때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산재보험의 적용조차 거부하였으나 운송거부투쟁에 대해서는 노동3권 인정이 전제되는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여 강제근로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음(업무복귀명령 불응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제 사회단체는 이 제도가 권리는 부정하고 의무만 강요하는 위헌적인 파쇼악법으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공익성을 이토록 절감한다는 정부가 준비도 없이 등록제를 도입/강화하고, 운송료는 업계 자율로 팽개쳐두며, 관리감독의 책임마저 지자체로 서둘러 넘겨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함.

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악 : 단체 또는 다수인이 주차위반, 교통방해 등을 행한 경우 바로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40일)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심지어 경제속도운행까지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임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자영업자(1인사업자)에 대해 임의가입-자기부담 방식의 가입을 허용함. 화물운송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특수고용의 문제로 다루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자영업자로 적용을 공식화함.

<출처>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3. 노동열사 유서

(1) 태광대한화섬 박동준 열사 유서

유서1. 집 서랍에서 발견 했다고 함(A4용지에 매직으로 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죽음으로서 맞설 것이다.
날 용서해줘
당신 사랑해
우리아들 재석이도
어머님 죄송합니다. 못난아들

유서2. 박동준 동지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했다함(A4용지에 매직으로 씌)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유서3.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했다 함(A4용지에 매직으로 씌)
사측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말라

(2) 한진중공업 김주의 열사 유서

유서 1.

오랜만에 맑고 구름없는 밤이구나.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한번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을 한 모양이다.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당기 순이익의 1.5배, 2.5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원 정도의 배당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5백억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21년, 그런데 한달 기본급 105만원, 그중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8십몇만원 근속년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텐데 헛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사람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경영진들은 지금 자신들이 빼어든 칼에 묻힐 피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원한다면 가까이 제물로 바치겠다.

하지만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에 구속해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때까지 이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함께 해준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 40년의 인생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뿐.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무엇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무어라 할말이 없다. 아이들에게 윗리스인지 뭔지를 집에 가면 사주겠다고 크레인에 올라온지 며칠 안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준엽아. 해민아. 준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적어보는 이름이구나.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보.

결혼한지 십년이 넘어서야 불러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호칭이 되었네. 그동안 시킨 고생이 모자라서 더 큰 고생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강한 태가 있는 사람이라서 잘 해주리라 믿어. 그래서 조금은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먼저 가신 부모님과 막내 누나를 만날 수 있을꺼야. 그럼 모두 안녕.

2003년 9월 9일. 김 주 익

유서2.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의 경영진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대의원 이상 간부동지들.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투쟁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노동조합을 사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생존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동지들

나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한 간에 나의 주검이 있을 곳은 85호기 크레인입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은 크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킬 것이며 조합원의 승리를 지킬 것입니다. 10. 4. 김 주 익

(3) 세원테크 이혜남 동지 유서

유서1. 아산경찰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문 뒤에 쓴 글

노동자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몸 하나에 인생을 의지하고 살면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법에서도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답게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했고 투쟁한 댓가로 구속도 되었고 해고도 되었다. 노동자가 법에서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수배되고, 해고되는 정말로 웃기는 나라에서 더 이상은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할 것 같다.

노동조합이 결성 되지 엇그제로 만 2년이 지났다.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이래 투쟁조끼를 벗어본 적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해 왔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고 이현중 열사의 한을 풀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수배 생활을 한 지가 달포가 넘어가지만 내가 이현중 열사와 고생하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동안 어찌됐든 2년여를 노동조합을 이끌어 왔지만 지금 같이 힘들고 괴롭지는 않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조합원 동지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나로 인해 너무나 마음 고생이 많았던 것,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어 가슴이 아프다.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내 한 몸 희생으로 노동탄압,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라는 것들은 정말 없었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현중이의 한을 풀 때까지 저의 시신을 거두지 마세요.

현중이와 함께 노동해방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경호야, 인호야!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민주노조 반드시 사수해서 노동해방 세상에서 만남시다.

2003년 10월 17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세원테크지회 지회장 이 혜 남 올림

유서2.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숨가쁘게 살아온 것 같다.

뒤돌아 볼 겨를도, 여유도 없이 앞만 보며 살아온 날들이 삶의 가치를 느낀 적도 있었지만 나를 믿고 여지껏 살아온 나의 가족과 동지들에게 너무나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인간답게 살자고 노동조합을 정말로 힘들게 결성했으나 악질 기업주 김문기 회장은 수억원을 들여 용역강패를 이용해 우리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아예 노조를 없애고자 수습역을 쳐들여 노조파괴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구사대, 공권력을 동원해 우리의 사랑하는 동지 이현중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 이현중 열사의 한을 풀어 달라고 대구에 내려와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연행하고 간부 3명을 구속까지 시켜 놓은 세원그룹 회장 김문기를 용서할 수가 없다.

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수습역원의 손배·가압류와 구속, 수배,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라면 차라리 이런 나라에서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해 옹지 않은 방법임을 알면서도 많은 동지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죽음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발~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노동탄압 없는 세상.

노동자가 고통받는 지금의 세상이 바뀌어 지기를...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 그리고 노조파괴 전문가 장현수 사장, 김성백 이사, 정상민 이사!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차디찬 길바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현중이의 한을 풀기 위해 고생하는 조합원 동지들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나의 심정을 알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마디만 충고하겠소.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제2의, 제3의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이 땅의 노동해방을 위해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내팽개치면서도 악착같은 투혼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동지들을 나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지들!

끝까지 질기게 투쟁해서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하기 바랍니다.

동지들의 투쟁하는 모습은 배달호 열사, 이현중 열사, 김주익 열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지들!
힘들고 어렵지만 기필코 우리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인 민주노조를 사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원투쟁에 함께 하고 계신 대구본부, 대구지부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동지들!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인호, 경호 부탁드립니다.
해방세상에서 만납시다.
이 해 남 올림.

유서3.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보!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못난 남편 만나서 15년 동안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 왔지요?
하루 한시도 가족들에게 가장다운 가장이 되지 못했고, 늘 있으나 마나 한 말로만 가장 이었던 게 사실이지요. 15년 살아 오면서 당신한테 너무 잘못된 일들이 많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구려.
그래도 용서해 주구려. 내가 죽어도 당신 남편, 인호 아빠, 경호 아빠로 남아 있을 테니까 말이오.
여보!
나중에 인호, 경호가 크면 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 할꺼야.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이 못난 아빠를 야속하게 생각하겠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 아들이 있지 않소?
경호는 듬직하고 의젓해서 믿을 만 하고, 인호는 개구쟁이지만 손재주도 많고 영특해서 나중에 잘 될 것 같고.

여보! 나 없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잘 챙겨 줄 꺼야.
1주일에 한번쯤은 애들 목욕부탁도 하고...
인호야! 경호야!
정말 미안해... 못난 아빠 용서해 주렴.
그리고 모레가 인호 생일인데, 같이 못해 미안하다. 인호야.
아빠가 하늘 나라에서 너희들 자라는 모습 지켜볼게. 안녕.
- 못난 아빠가 -

유서4.

동지들께
하루종일 대구시내를 돌아다니고
먼발치서 고생하는 조합원동지들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하다.
이 추운 날씨에도 비닐 한 장에 의지한 채
곳곳하게 투쟁하는 조합원 동지들이 있어서
조금은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 할텐데, 걱정이야.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독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영웅 부지회장, 권세 회계감사, 이용덕 대협부장
미안하오. 수배라는 이유로 면회 한 번 가지 못하고
동지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는 못난 지회장을 용서하시오.
매사에 침착성을 잃지 않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구재보 사무장 동지!
정말 미안하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소.
사무장! 내 성격 잘 알지요?
나머지 몫은 동지들이 잘 할 것으로 믿고 편히 가겠소.
현중이의 장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나의 시신도 거두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동지들!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 부탁드립니다.
2003. 10. 22, 이 해 남 올림.

유서5.

노무현 대통령께
정말로 이 나라는 노동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가는 노동자들, 농민들, 영세상인들, 그리고 빈민들이 억압받고 꺾박받으며 사는 나라,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돈 있고 뺨 있는 놈들은 수천억을 해 쳐먹고도 검찰에 출두해서 몇 일 콩밥 먹고 나오면 그만이고, 가난하고 힘 없는 노동자들, 농민들, 빈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몇 년씩 구속되고, 수배되고, 가장까지 파탄되는 지금의 이 나라 현실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예전에 변호사 시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때도 있었지요?
저희 세원테크 사태와 관련하여 몇 차례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을 했었지만 여지껏 묵묵부답이고요. 세원테크 불법폐기물 매립,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세원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등 수 많은 사측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고발하고 진정을 해 봤지만, 역시 김문기 회장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저희들이 2년 전에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 간부들 전체가 집행유예, 구속, 수배, 손배, 가압류를 당하지 않은 간부가 없으며, 구속 중에 있는 조합원을 해고시키고 또 해고시킨 뒤에 다시 구속시키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세원테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대,
이 나라의 법과 법을 집행하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모든 국민 앞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돼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대화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악질 기업주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지회장 이 해 남 올림.

광목 천에 남긴 글

동지들이여!
2년여를 함께 했지만 남은 건 조합원들의 고통과 한숨뿐.
이제 나머지 짐을 동지들께 남기고 먼저 갑니다.
나 하나의 죽음으로 동지들의 염원인 민주노조 사수, 노동해방이 앞당겨 진다면
나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없어지지만 내 영혼만은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가자! 해방된 세상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물통 반말짜리 1개를 사고 3,000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10,000원
성서병원 뒤로 돌아서 세원정공 뒷담으로
넘어가(몸에 기름을 붓고)
정문 옆으로 가서 가방을 조합원들 있는 곳에
던지고 바로 라이터를 켜다.

여기서 가는 차비 700원
물통 3,000원
기름 10,000원

13,700원

남은 돈으로 뭘 하지?
인호 케익사서 부칠까? 널 모레가 인호 생일인데.
어떻게?
- 인생무상 - 노동해방을 위하여

(4)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일사 유서

유서1.

조합원동지들께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결의를 다져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각 지부 순회, 대의원대회, 총회 등을 통해 동지들과 함께 했던 많은 얘기들, 동지들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파업을 준비하며 사측의 많은 부당노동행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까 가슴이 매어옵니다.

동지여러분!

오늘 참석치 못한 동지들을 저의 희생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회유와 압박, 탄압을 뚫고 여기온 동지들의 결의가 우리 집행부를 이만큼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체가 노동자로서 승리입니다. 직원을 탈피한 진정한 노동자로서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 함께 하지 못한 동지들의 몫까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노예문서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합니다.

"나 하나 썸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만, 우리만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인 자리를 자축하며 즐겁게 투쟁합시다.

동지여러분!

우린 정말 순수하고 자주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지금 투쟁은 매년마다 할 수 있지만 기본없는 노동조합은 결국 쉽게 어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 이 자리 이 시간들의 의미를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짐을 챙겨 떠날 때 그날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차마 얼굴을 뺏지 못한게 미안합니다. 파업을 앞둔 공공연맹 사무실이 무척이나 조용하네요.

동지여러분!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이 모여 넷이 되듯,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해서 안될 것입니다. 100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길을 간다면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하지 못함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기약이라 생각하십시오.

오늘 동지들이 모여 있음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정당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음이 꼭 승리하겠습니다.

2003. 10. 26. 03시, 이 용 석

유서2.

위원장님께
집행간부님들께

32년 평생(일생)동안 우리 공부방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내 삶의 스승이자 등대였습니다.

내 어두운 미래나 긴 터널 속에서 나를 빛으로 깨우게 한 나의 동반자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 희망과 빛으로 6개월 시간을 동지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정종우 위원장님, 정혁준 부위원장님, 이상엽 서울본부장님, 현수원 부산본부장님, 신순호 대구본부장님, 채경자 사무차장님...

동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그 혼한 단체사진하나 없네요. 수개월동안 동기동락한 기억과 추억과 감동속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는 제 행동을 너그러이 용서를 바랍니다.

10월 9일 중앙집행위에서 파업을 결의하였을 때 이미 오늘을 예고하였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몸으로써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몫을 제가 다하고자 합니다.

정종우 위원장님, 서울본부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줄로 믿습니다.

짐을 꾸리기 위해 목포서 내려가는 버스가 유난히 과속을 하네요. 자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는 없지만 이를 악물고 울지 않을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라 욕하며 비웃어주세요. 어머니 얼굴 뺏지를 못하고 가네요.

2003. 10. 23. 심야우등버스 안에서 이 용 석

<별첨>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최근의 노동자들의 연이은 분신, 자결 사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경제우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자,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처절한 인권선언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채, 김대중 정부의 길을 이어 친자본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배이다. 우리는 현재의 심각한 노동 기본권 침해는 결국, 노동자와 민중들의 정당하고도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책임은 결국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다음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요구한다.

1. 노무현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신중노동탄압 수단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금지 법규를 제정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청구되어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최하하고, 노동조합비와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규직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실천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낳는 정부기관이 각종 지침들을 개폐하여야 하며, 특히 조달청 물자조달지침과 최저낙찰가제는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정부, 국회는 개악된 노동법을 원상회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을 노동자들의 파업권 보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3권 인정,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 인정 등의 노동기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관점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노무현 정부는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다음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노사 분규 현장에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노동현장에 범질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는 노동위원회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 구속 노동자는 석방하고, 수배 노동자는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용역깡패 조직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부당해고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상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정부는 노동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이전까지 집회와 시위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법원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 관련 판결 관행을 철저히 점검, 방향을 수정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3.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우선정책'을 시정하라

- WTO 협상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허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민중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는 협상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민중들의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킬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무역협정 체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온갖 인권침해와 차별을 정착시키며 인권상황을 급격하게 후퇴시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해야 한다.

- 자본의 탐욕스런 요구에 편승해 노동의 유연화와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

- 향후, 민중의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제정책들의 수립 시에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민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수립에는 인권적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노동상황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와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한 결과였음을 직시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노동형제들과 함께 어깨 곁고 나갈 것이며,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고발할 것이다.

2003년 11월 5일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29개 단체)